CNI세미나 2017-162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 세미나

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한·중 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일 시 : 2017. 12. 13.(수) 13:3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국립공주대학교 KONG JU NATIONAL UNIVERSITY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 세미나

□ 세미나 주제 : 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한·중 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드 이후 경색된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및 도시간 협력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한중 지방간 경제협력 방안을 통해 양국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

□ 일 정 : 2017년 12월 13일(수) 13시 30분~18시 10분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후 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 참여자

연번	구분	소속	직명(급)	성명	비고
1	개회 및 좌장	SUNY Korea (전 주중한국상회 회장)	교수	왕윤종	
2	환영 및 좌장	충남연구원	원장	강현수	
3	발표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양갑용	
4	발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아	
5	발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한	
6	토론	공주대학교	교수	박순찬	
7	토론	공주대학교	교수	남수중	
8	토론	인천대학교	교수	이주영	
9	토론	KOTRA	연구위원	정환우	
10	토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정지현	
11	토론	경기대 대학원	교수	오대원	
12	토론	충남연구원	미래전략단장	송두범	
13	사회 및 토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박경철	

세미나 주요 세부 프로그램

등록 13:00~13:30 사회: 박경철(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팀장)

개회식 13:30~13:40	개회사: 왕윤종 교수(SUNY Korea, 전 주중한국상회 회장) 환영사: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
1. 세션 13:40~15:40	좌장: 왕윤종 교수(SUNY Korea, 전 주중한국상회 회장) **주 제I: 19차 당대회로 보는 중국의 대외경제전략과 대응** 발 표: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토 론: 정환우(KOTRA 동북아사업단 연구위원) **주 제II: 한·중 FTA 협정과 지방 경제협력 확대 방안** 발 표: 김명아(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이주영(인천대학교 학술원 교수)
Coffee Break 15:40~16:00	
2. 세션 16:00~18:00	좌장: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 **주 제III: 한·중 지방 연계협력 강화 방안 –지방정부 대외교류체계 검토를 중심으로** 발 표: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토 론: 오대원(경기대학교 교수) **종합토론(Round Table):** 정지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팀장) 박순찬(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남수중(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송두범(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단장) 박경철(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팀장)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폐회식 18:00~18:10	폐회사: 남수중 교수(공주대학교)

이동 및 만찬 18:10~20:00

01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 세미나]

『19차 당대회로 보는 중국의 대외경제전략과 대응』

양 갑 용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19차 당대회로 보는 중국의 대외경제전략과 대응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들어가는 말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2017년 10월 18일~24일까지 개최되었다. 당대회 폐막 후 다음날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1중전회)가 개최되어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를 구성했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에서 “전면 소강사회 건설에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는 제목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전면 소강사회 건설에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분투하자(不忘初心，牢记使命，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不懈奋斗)”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 비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로 시선을 돌려 적극적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교통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글로벌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특히 중국과 세계가 함께 21세기를 함께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중국경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이기도 했다. 따라서 19대에서 논의된 많은 논의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에 관련된 내용은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의 방향과 관련되어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적어도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는 중국이 이전과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중국을 새롭게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당대회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당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외경제전략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번 당대회는 사실상 시진핑 2기 체제(2017-2022)를 맞아 중국의 국가전략 비전의 대강을 선보인 자리였다. 그 내용은 중국식 제도와 규범 그리고 담론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신감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국은 현 정세를 비상한 도전이 예상되는 관건적 시기로 간주하고 새로운 이념과 리더십을 통해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과 2021년 공산당 창당 100년을 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건국 100년을 맞아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간단계로 2035년을 설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의 대외경제전략도 복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2기의 모든 대외전략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맞춰져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바로 이번 당대회라고 할 수 있다.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 중국은 현 시기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로 들어가는 관건적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역사적 준비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중국은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으로 중국의 역사 발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아름다운 생활(美好生活)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아내고 있다. 비록 보고에서 언급한대로 지난 시진핑 집권 5년이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지만 사실상 이는 지난 개혁개방 40여 년의 전 과정이 평범하지 않은 역사 진화 과정이었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즉 외부환경의 변화, 국내 정치상황 및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제는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틀을 바꿔야 하는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외경제전략의 변화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제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는 12.5 규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13.5 계획의 순조로운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집권 2기에서도 13.5 규획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과 조치가 큰 틀에서는 변화 없이 추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이미 시행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계승에 방점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큰 틀의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사고를 시진핑 2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변화의 지향점과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의 중단이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케 한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 정책은 시진핑 집권 2기에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중국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가운데 대외경제전략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는가? 이는 중국공산당이 역사적 사명에 답을 해야 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대외경제전략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명과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는 일종의 원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중국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역사적 소명이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외 전략 등이 모두 이에 복무해야 한다는 인식이 투사되어 있다. 중화민족의 문명사를 복원하고 중화문명의 새로운 창조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사회주의의 제대로 된 복원 혹은 강화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강하지 못하고 강대하지 못한 빈곤한, 유약한 사회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즉 소련과 동구유럽이 실패한 사회주의의 복원을 중국이 재생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대외경제전략에도 스며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이제는 사회주의 주류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마르크스주의를 잘 구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당대회 보고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방향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반드시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고에서 제시한 기본 방략 14가지 역시 이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열네 가지 과제 가운데 경제전략 관련 부분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해야 하고, 발전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발전이념의 견지는 바로 중국이 향후 발전과정에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와 분배제도 등 공유제 경제를 견지한다는 전제 위에서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계속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추동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즉 향후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등 중국 경제의 각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중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즉 국가 개입적 경제발전 모델을 계속 강화해 가겠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세계 경제의 파이를 확대해 가는데 정부 역할이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은 중국의 대외경제전략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기 시작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논의는 빠르게 탄력을 받아 중국의 대외전략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성 동력은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안정적인 국제질서이다. 중국은 대외전략에서도 이제는 반드시 국내와 국제라는 양면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정책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평화 발전의 길과 호혜상생의 개방 전략에서 중국의 대외경제와의 호응은 이제 상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평화의 건설자, 세계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려고 하고 이는 경제적 성과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중국의 개방의 속도(速度), 심도(深度), 관도(寬度)가 이전 시기에 비해서 훨씬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 한층 강화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데 시간표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한 점도 중국 경제전략 변화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13.5 규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결정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시기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다. 그 목표는 대부분 다름 아닌 경제적 성과로 성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목표로 제시된 목표를 당연히 완수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중국의 모든 자원이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 동원되고 배치될 것임을 의미한다. 2020년 이후 2050년까지 30년 동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두 단계로 접근하여 본 세기 중엽에 반드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사실이다. 총서기의 이러한 언급은 중국의 모든 정책이 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길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보고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경제 실력의 증대, 과학기술의 제고, 문화소프트파워의 강화, 발전격차 해소, 인민생활 향상, 사회관리의 향상, 생태환경의 개선 등 종합국력의

부단한 증대와 국제 영향력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핵심은 당연히 경제적 성과를 통한 부유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는 강대한 국가로 나아가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보고에서 중국의 발전 과정을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이제 강대해져야 한다는 언급과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경제관계를 포함하는 경제전략의 종결점은 바로 현대화된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발전 이념이 필요하고, 그러한 발전 이념은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당위성이 논리에 녹아들어가 있다.

중국의 현대화된 경제체계 구축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경제전략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목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지속적이며 건전한 발전이 향후에 핵심적이 경제전략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성장을 계속하되 기존과 같은 지속적인 성장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발전'과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중국의 발전이 환경 파괴적이고 에너지 소모형 구형 경제발전이 아니라 지속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연동시키는 발전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즉 중국은 성장을 계속하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성장방식에서도 전환을 모색하고, 경제구조에서도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 성장 동력을 확대, 심화해 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급측 구조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이다.

보고에 의하면,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 동력의 변혁을 추진하고,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과학기술혁신, 현대금융, 인력자원이 협동 발전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미시적 경제 주체가 활기를 띠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향후 구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현대화 경제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를 들 수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은 실물경제의 질적 수준 강화이다. 즉 제조강국 건설 강화, 선진 제조업의 발전,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결합, 고급 소비 유도, 저탄소 녹색성장, 공유경제, 서비스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점 육성 등을 들고 있다. 보고는 중국이 적어도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또 찾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전통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 그리고 이를 현대 서비스업과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중국 산업의 글로벌 가치 공급 사슬의 진화,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수리, 철도, 도로, 수상운송, 항공운송, 가스관, 전력망, 정보, 물류 등 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강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우리의 대중국 협력 수준과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전략도 경제체계 전환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삼농(三农)' 문제의 해결을 항상 당 전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이는 시진핑 집권 2기 기간에도 빈곤탈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삼농'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도농 융합발전,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농촌토지제도개혁,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식량 안보, 농업과 농민 지원제도, 현대농업발전, 1·2·3차 산업의

융합 발전, 농민의 취업과 창업, 농촌관리체계 등에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과 농민의 취업과 창업 방면 등 생활개선과 소득증대사업에서 성공적인 외부의 경험은 중국에게 반면교사가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도 중국 경제 변화에 중요한 관심 포인트이다. 개혁을 심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의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즉 지방의 최적화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는 이 부분에서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와 진(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구조 구축 의사를 드러냈고, 농촌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발표된 징진지 협동발전의 모델로 거론되는 슝안신구의 건설 노력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슝안신구 발전은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천년의 대계라는 점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시기에는 1기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폭넓게 추진될 가능성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장강경제벨트 발전도 이런 맥락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경제발전 전략이다. 해양강국 건설 역시 지역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급 발전전략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목해야 하는 부문임은 분명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도 경제체계 관점에서 보면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경제전략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보고를 통해 재산권 제도 보완, 국유자산관리체제 완비, 국유기업 개혁 심화, 혼합소유제경제의 발전, 세계일류기업 육성, 시장접근금지목록제도 시행, 서비스업의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문제, 시장감독관리체계 완비, 조세제도 개혁, 지방세 체계 개혁 건전화, 금융체제개혁 심화,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능력 강화, 자본시장 발전 촉진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했다. 특히 혼합소유제경제 발전과 서비스업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중국 사업에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밖에 자본시장, 금융시장 관련 전향적인 정책 방향 제시도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국제표준과 부조화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비제도화 혹은 덜 제도화된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과 개인에게도 기회의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개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점도 중국 경제전략의 새로운 강조점이다. 중국 대외개방의 핵심 사업은 바로 '일대일로'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서 대내경제와 대외경제를 결합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육지와 해양, 내외 연동, 동부와 서부 결합 등에 기초한 개방형 경제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 기업가의 투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특히 중국 경내에 등록한 모든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일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자유무역 시범구, 자유무역항 건설 등의 대외투자 측면에서 우리는 범세계적 무역, 투융자, 생산,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 경제 협력 및 경쟁에서의 새로운 우세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취업 질 제고, 인민의 소득수준 향상, 사회보장체계 구축, 빈곤퇴치, 건강한 중국 전략, 공유형 사회관리제도 구축, 생태문명체제 개혁 등 보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역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전략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국이 이번 보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과제 역시 이 부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전한 발전 등도 중시하겠다는 전략의 강조점이 이전 보고와 다른 점이다. 예컨대 청산녹수, 금산은산, 생태문명 등은 19대 보고에서 새로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제시한 이러한 경제전략과 대외경제전략은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 결국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으로 연결된다. 즉 중국의 대내외 경제전략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전략의 심화

중국은 현 세계를 대발전, 대변혁, 대조정의 시기로 규정하고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계는 다극화되고, 경제는 글로벌화되며, 사회는 정보화되고, 문화는 다양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은 중국이 글로벌 관리체계와 국제질서의 변혁 과정에서 국가간 상호 연계와 의존성을 더욱 높일 것과 국제역량의 균형과 평화발전의 대세를 제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증가하고 세계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부족하고 빈부 분화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 그리고 지역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테러리즘, 사이버안보, 중대한 전염성질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인 안전위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일수록 꿈을 포기하거나 이상 추구를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어떤 나라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심지어 혼자 해결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과 힘을 합쳐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핵심은 과실을 서로 나누는 글로벌 경제동반자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동반자관계의 핵심을 여러 나라들과의 이익의 합류점을 확대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국과의 관계는 조율과 협력을 통한 총체적이고 안정되며 균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주변국과의 관계는 다시 친밀, 성실, 호혜, 포용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대외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즉 중국은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견지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그 핵심이 바로 '일대일로'의 적극 추진이다. '일대일로'를 통해 정책 소통(政策沟通), 시설 연결(设施联通), 무역 원활(贸易畅通), 자금 융통(资金融通), 민심 상통(民心相通)을 적극 실현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동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조할 것임을 이번 당대회에서 분명하게 공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다자간무역체제를 지원하고 자유무역구 건설을 촉진해서 종국적으로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후반기에는 '일대일로' 건설 추진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당대회 결의 이후 중국 경제전략과 대외경제 방향 변화

이러한 19대 보고를 기초로 중국공산당은 대표 대회 결의를 통해서 경제전략 혹은 대외경제관

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추진 사업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여 정책 변화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2)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3)2035년부터 이번 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즉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포함하여 적어도 본 세기 중엽까지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모든 자원을 여기에 투입할 것이다. 물론 경제 영역에서도 예외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중국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개념 역시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움 등 한층 분명하게 정리된 점이 바로 이번 당대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공급측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질적 변혁, 효율변혁, 동력변혁을 추진하고
2)실물경제, 과학기술 혁신, 현대금융, 인력과 자원이 조화롭게 발전된 산업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3)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 활기 있는 미시적 경제주체와 거시적 조정 역량을 갖춘 경제체제 건설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 위에서 향후 중국은 향후 경제 정책 방향으로
1)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적극 추진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
2)상호존중, 공평 정대, 협력 및 윈윈의 신형 국제관계 조성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3) ‘평화가 지속되고 안전이 보편화되며 공동의 번영이 가능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전략의 추진에는 당연히 최고지도자로서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관행의 수용과 명분의 축적은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19대 폐막식 연설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승리,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 시작”을 천명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고 강조한 것으로 봐서 중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목표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힘을 투사하고 있다. 특히 19기 1중전회 이후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기자 접견회에서 시기별로 중국의 임무를 제시하여 실천 일정도 대외에 명확히 천명했다.
1)2018년 개혁개방 40주년,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 지속 추진
2)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여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 추진
3)2020년,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 당과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빈곤 퇴치하고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기 위한 노선 추진
4)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적극 추동 등을 과제 및 정책 추진 프로세스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일대일로’ 건설 강화를 위한 당장의 수정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중국공산당 장정(章程)에 명확하게 적시한 것이다. 먼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대한 임무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장에 삽입한 것이다. 이름 석 자가 갖는 의미의 무게감이 정책 추진의 강력한 지원군과 동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마르크스 중국화를 위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데 있어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경제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매우 폭넓게 강조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강조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강화로 이어져야 함을 이번 당대회는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개혁과 발전은 반드시 훨씬 질 높고, 훨씬 효율적이며, 훨씬 공평하고, 훨씬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당장에 명확히 수록되었다. 이를 위한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등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을 당장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과 생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의 추진을 천명했다. 이는 향후 중국이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 특히 생태문명, 환경보호 등 새로운 방식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의 대응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다음으로,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당장에 분명하게 삽입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대일로’ 건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삽입한 이상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관계는 반드시 ‘일대일로’ 추진에 모든 정책 역량이 맞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시진핑 집권 2기를 포함하여 중국의 모든 정책이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대회 보고에서 적시하고 결의를 통해서 의지를 확인하며 시진핑의 언술과 당장의 명문화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해졌다. 적어도 본 세기 중엽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 유력한 수단 혹은 방법은 바로 ‘일대일로’ 건설의 강력한 추진에 있다. 모든 정책과 조치가 바로 이 ‘일대일로’ 추진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어떻게 개념규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아갈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책으로 추진하고 특히 당장에 명확하게 삽입한 이상 ‘일대일로’ 건설이 퇴보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적어도 시진핑 집권 기간에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선, ‘일대일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과잉 유휴설비의 해외 이전 혹은 강력하게 추진되는 일종의 마샬플랜 정도로 알고 있었던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한국과 지방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각 부문에서 어떻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력 혹은 발전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 연선 지역의 지방정부의 협력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뿐만 아니라 해양실크로드 연선도시나 지방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방정부와 연선도시도 대부분 ‘일대일로’에 정책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동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우세를 잘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현시켜 강력한 비교우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연선도시가 ‘일대일로’에 적극 연결고리를 찾고 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두 해당 지방이나 도시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 역시 충남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일대일로’ 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비교우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행위자들이 제3국을 상대로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진출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2014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언급한 내용도 있어서 양국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19대를 통해서 중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특히 이를 당장에 삽입하여 중국이 계속해서 견지해야 하는 발전 방향을 명확히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대일로’를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과장되게 말하면 중국의 향후 모든 정책, 특히 대외관계 변화는 이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움직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중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잘 편승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상호보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혜를 모우고,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고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보다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공간 활용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모든 정책의 창구는 지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끝)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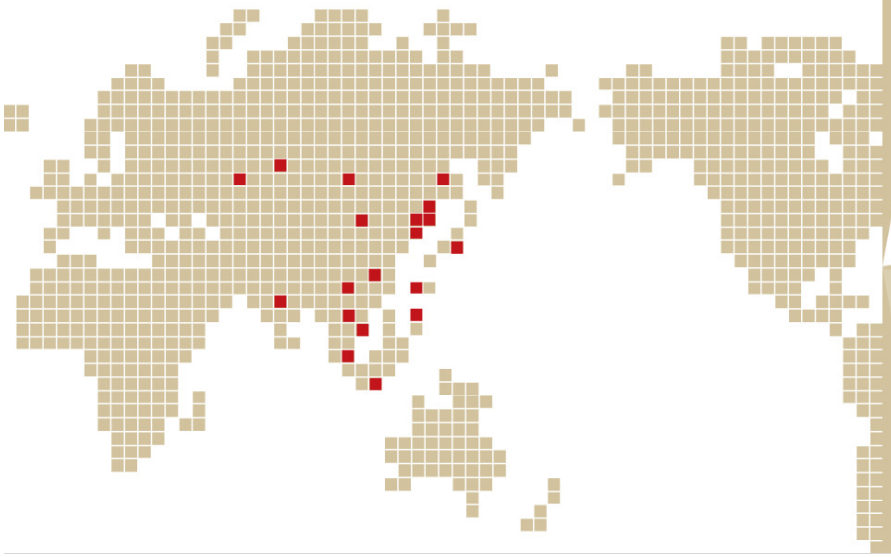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 세미나]

『한·중 FTA 협정과 지방 경제협력 확대 방안』

김 명 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중FTA 협정과 지방 경제협력 확대 방안



김 명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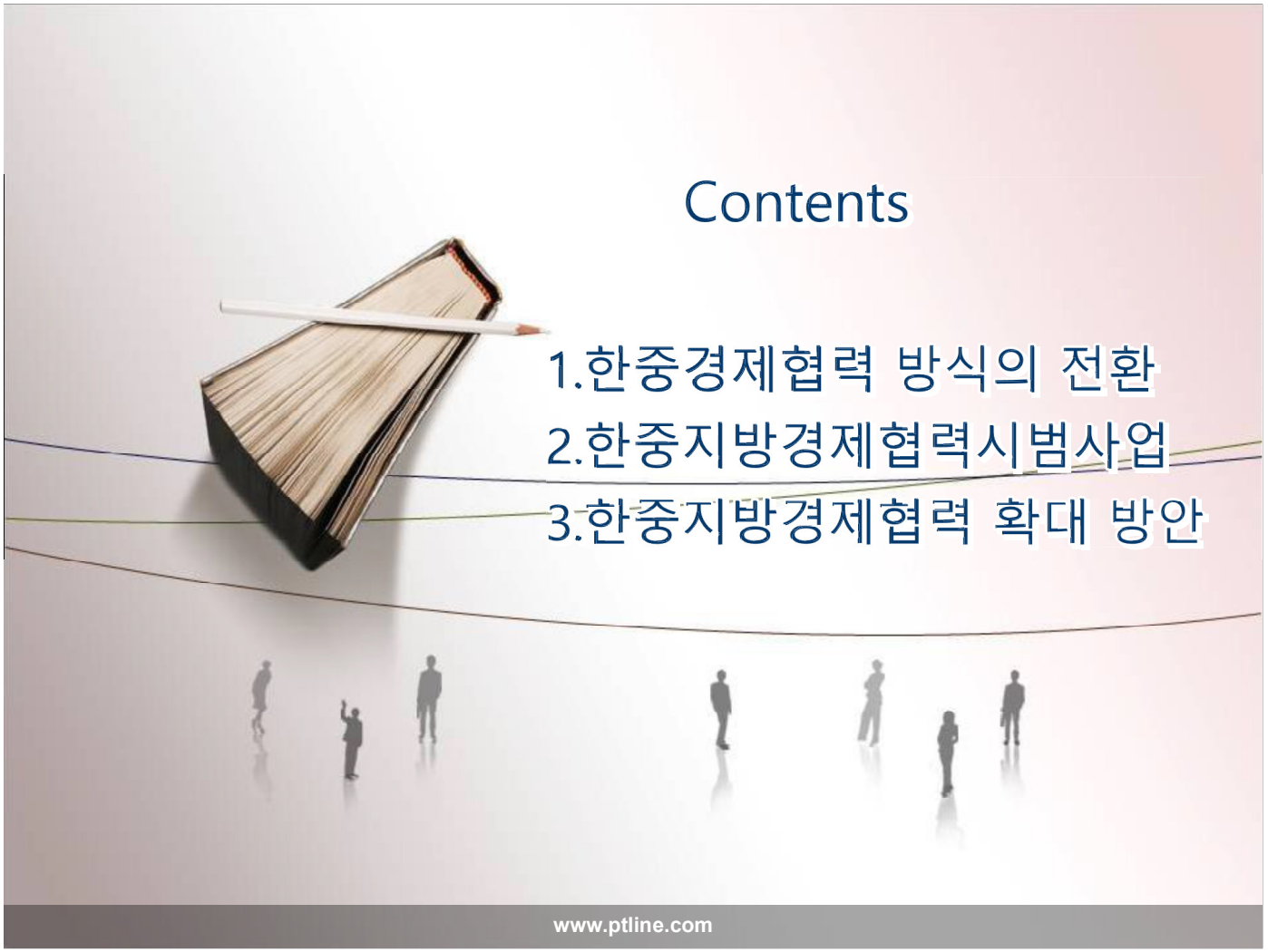
2017. 12. 13. in CNI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h.D.
Kim, Myoung-Ah
Senior Research Fe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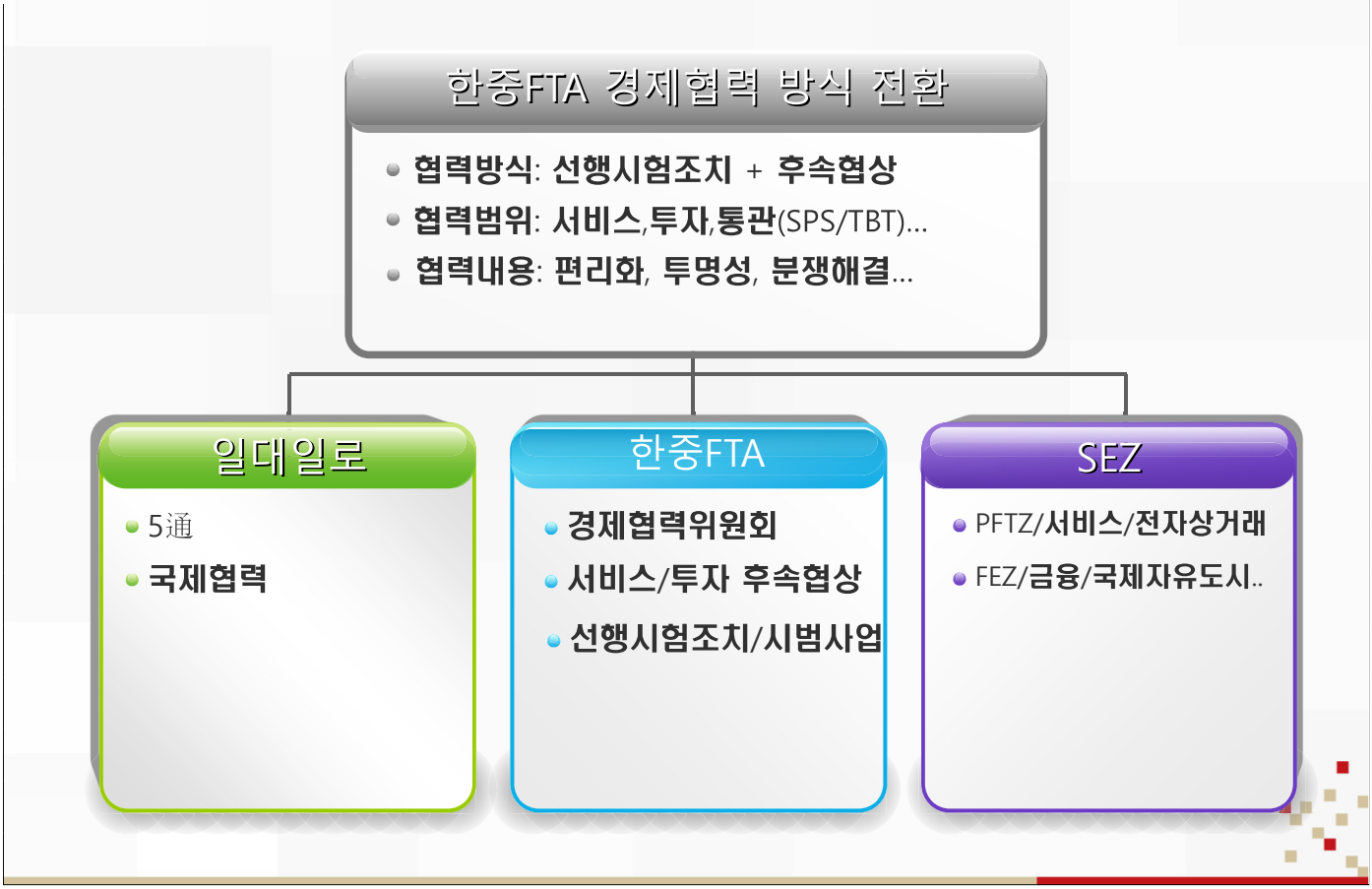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 한중경제협력 방식의 전환

한중FTA 경제협력과 중국의 일대일로/SEZ



중국의 일대일로정책과 한중FTA

➢ **OBOR(一带一路)路**

一带： 丝绸之路经济带
一路： 21世纪海上丝绸之路

一带一路 5通

政策沟通(정책협력)
道路联通(교통협력)
贸易畅通(무역협력)
货币流通(금융협력)
民心相通(인문협력)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중국의 정책과 한중지방정부간 협력의 연결점

5通	구체적 내용	한중지방정부간 협력
정책 협력 (政策沟通)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적.법률적 차원에서의 협력기제 마련	특구 간 자유화시범사업 개발 및 제도 지원
교통인프라 구축 (道路联通)	중국과 각국을 연결하는 교통.해운.항만.에너지 인프라 구축	항공/항로 연결 및 노선개발
무역 편리화 (贸易畅通)	자유무역지대 건설, 국제전자상거래 활성화, 서비스 무역 활성화, 검역/인증.표준 협력	OneStop 통관, AEO 상호인증, 서비스 무역 거래 활성화, 해외(역)직구편리화, 검역/인증.표준 협력
금융 협력 (货币流通)	실물경제기반 금융.통화 협력, 통화스왑 규모 및 결제 범위 확대, 아시아 채권시장 개발, 해외기업의 중국내 채권발행	위안화무역결제 및 위안화표시채권 발행, 위안화직접투자 등 관련 금융상품 개발, 한중지방경협 기금 조성
민간 교류 (民心相通)	유학생 지원, 관광협력, 실크로드관광상품개발, 출입국간소화	지역특화관광개발, 출입국규제 완화, 의료.교육 개방 조치

2 한중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

한중FTA를 통한 한중경제협력방식의 진전

✓ '15.12.20. 한중FTA발효

- **경제협력분야 일반원칙** : 경제협력 목적/방법 구체화,분쟁해결적용제외,경제협력위원회
- **경제협력분야 구체내용** : 농수산물, 산업협력, 정부조달, 기타 협력분야
- **한중FTA경제협력 분야의 특징**

  -제17. 25조: 지방경제협력시범사업 설정(시범협력항목 구체화 중)

  -제17. 26조: 한중FTA산단 개발/운영 협력

  -제22. 2조 :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 및 부속서 관련 후속협상

  -제8. 14조 : 서비스무역위원회

  -제12. 17조 : 투자위원회

➢ 제17. 25조 확대+제22. 2조 후속협상 =한중지방경제협력구(SEZ) 선행시험조치 가능성?

한중FTA 협정문 - 지방경제협력

제17장 경제 협력

제17.25조 지방 경제 협력

1. 양 당사국은 동 협정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방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시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확인함으로써 시범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동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 후 웨이하이 및 인천의 각 시정부에 의해 논의된다.

2. 시범 협력 사업은 동 협정 체제 하에서 지방 경제 협력을 위한 모범적이고 선두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수행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시범 협력 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 지방 경제 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한-중 SEZ 현황과 한중지방경제협력 대상 선정

✓ 중국: 경제특구성시범지역 운용 -> 개혁개방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PFTZ) : 금융개혁**3.0 +11개 PFTZ
  （상하이4배 확대, 푸젠/광동/텐진 추가 -》辽宁/浙江/河南/湖北/重庆/四川/陕西）
-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示点城市)**
- **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
- **금융종합개혁시험구, 남색경제구, 국가급신구** 。。。

✓ 한국: SEZ 운용 -> 경제활성화, 국가균형발전

- **경제자유구역**
- **금융중심지**
- **제주국제자유도시**
- **기업도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한중지방경제협력 방안의 방향성

한중지방경제협력 대상 확장

- **협력방식: 선행시험조치 + 후속협상(2단계)**
- **협력시기: 2단계협상 과정에서 선행시험조치**
- **협력체계: 한중FTA에 근거, 중앙정책 수립**
  한중지방정부협력 대상지역 확대

한중FTA

- **경제협력위원회 조직 활용**
- **2단계 협상의 범위와 목표**
- **선행시범조치방식 시범사업**
- **지방경협 체결의 법적 주체**
- **심의/의결기관, 연락기관**

SEZ

- **중국의 어느 SEZ을 타겟?**
- **FEZ으로 한정할 것인가?**
- **FEZ이 없는 지역은?**
  (ex. 제주, 충남...)
- **SEZ을 자유항으로 묶어서**
  한-중 자유항 간 MFN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PFTZ)

제1차 2013.9.
- 上海

제2차 2015.4.
- 上海（4倍）
- 天津
- 福建
- 广东

제3차 2016.9.1.
- 辽宁
- 浙江
- 河南
- 湖北
- 重庆
- 四川
- 陕西

11개 자유무역시험구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
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城市 2016.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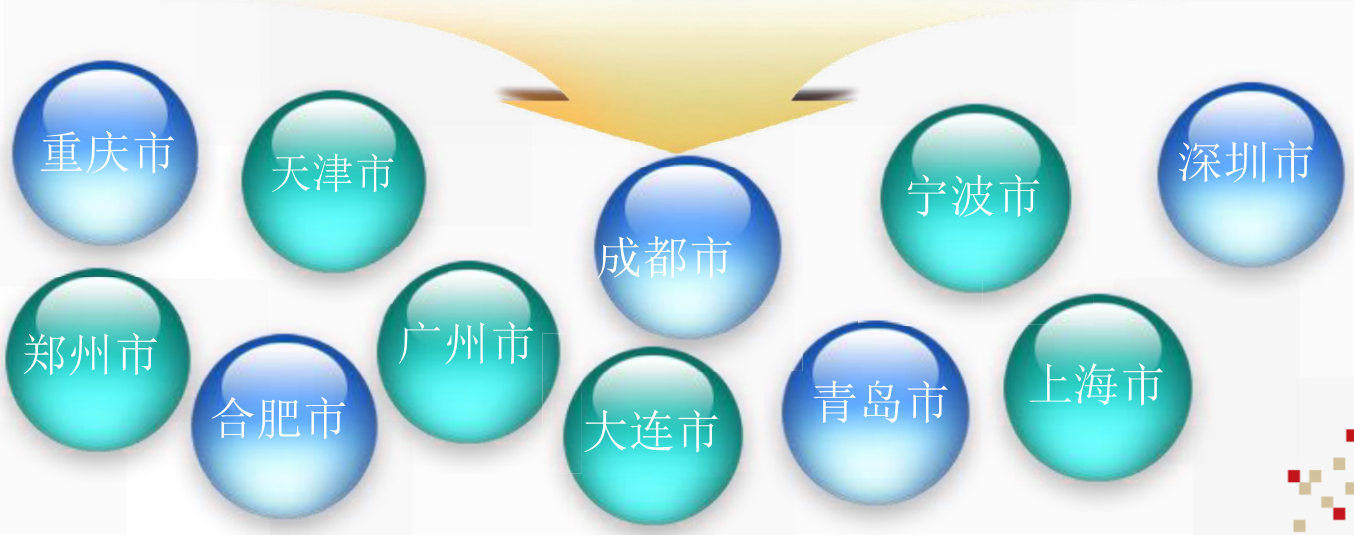
天津 | 上海 | 海南 | 深圳 | 杭州 | 武汉 | 广州 | 成都 | 苏州 | 威海

哈尔滨新区 | 江北新区 | 两江新区 | 贵安新区 | 西咸新区

苏州市

（2015. 3. 7. ）

2016.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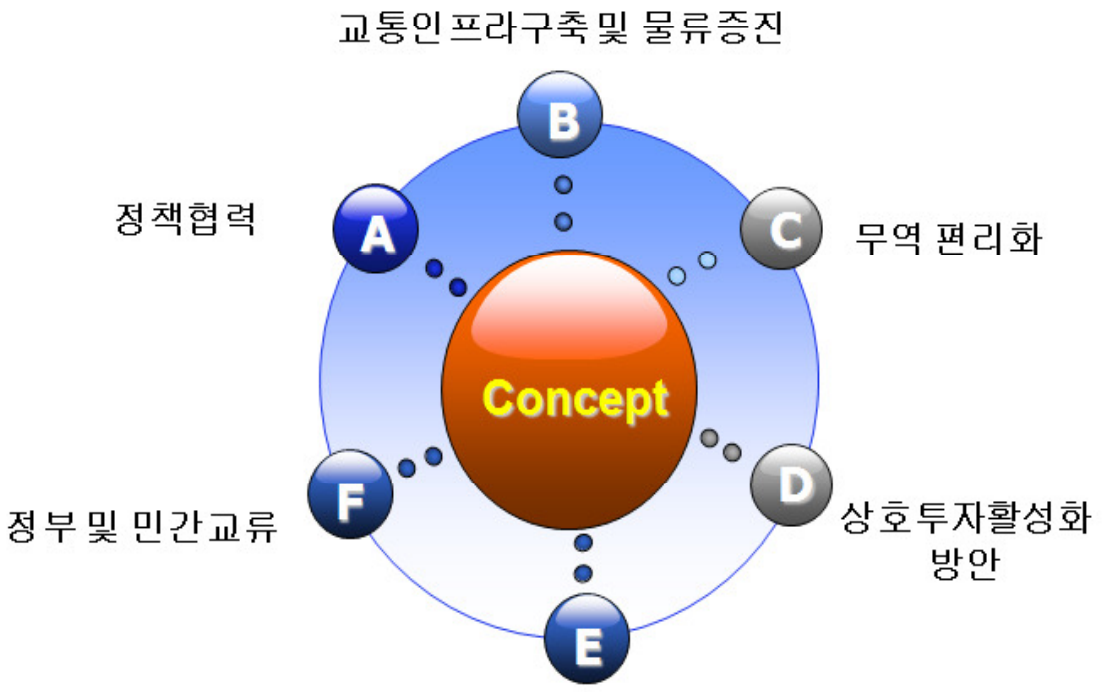


중국의 목적별/유형별 SEZ과 자유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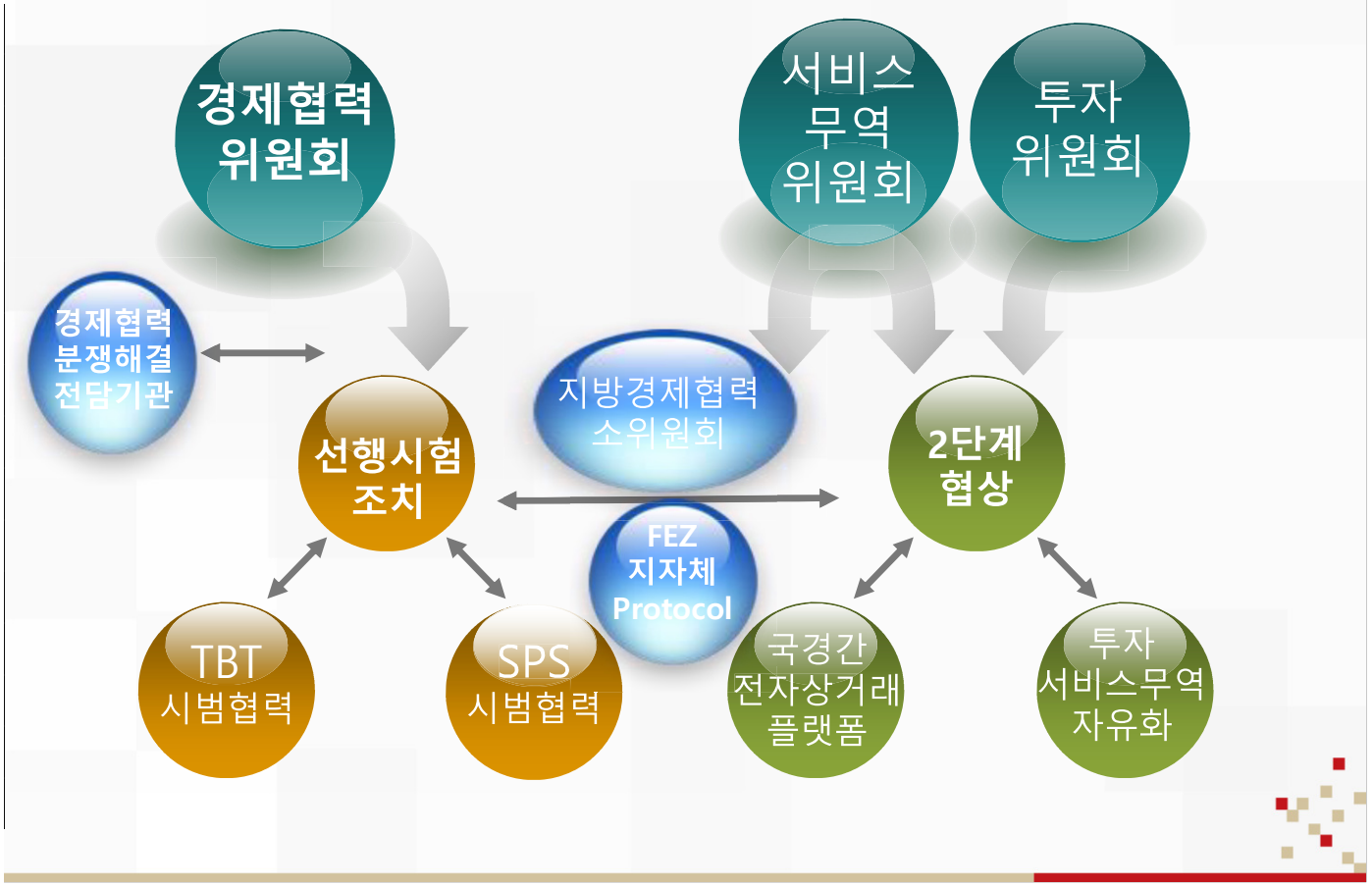
	지역	PFTZ	금융개혁	서비스무역혁신	국제전자상거래	국가급신구
1	상하이	○		○	○	○(푸동)
2	텐진	○		○	○	○(빈하이)
3	푸젠	○	○(취안저우)		○(푸저우)	○(푸저우)
4	광동	○	○(주강삼각주)	○(션젼,광저우)	○(션젼,광저우)	○(광저우 난샤)
5	저장	○	○(원저우)	○(항저우)	○(항저우,닝보)	○(저우샨 천다오)
6	스촨	○		○(청두)	○(청두)	○(텐푸)
7	랴오닝	○			○(다롄)	○(다롄진푸)
8	허난	○			○(정저우)	
9	후베이	○		○ (우한)		
10	충칭	○			○ (충칭)	
11	샨시	○		*드론물류		○(시시엔)
12	샨동		○(칭다오)	○(웨이하이)	○(칭다오)	○(칭다오 시하이안)
13	윈난		○(옌벤)			○(텐중)
14	장쑤			○(쑤저우)	○(쑤저우)	○(난닝 장베이)
15	헤이롱장			○(하얼빈)		○(하얼빈)
16	뀌양			*빅데이터클러스터		○(귀저우 귀안)
17	허베이					○(슝안)
18	안훼이				○(허페이)	
19	후난					○(샹장)
20	지린					○(창춘)
21	장시					○(잔장)
22	깐수					○(란저우)

3 한중지방경제협력 확대방안

한중지방경제협력 확대 시 정책적 고려 사항



[한중지방경제협력 소위원회]설치(경제협력위원회산하)



감사합니다!

03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 세미나]

『한·중 지방 연계협력 강화 방안: 지방정부 대외교류체계 검토를 중심으로』

김 수 한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한·중 지방 연계협력 강화 방안:
지방정부 대외교류체계 검토를 중심으로[1)]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1. 들어가며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과 상호연동성이 급속히 심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의 사회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역시 이 같은 상황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경제, 군사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왔다. 그러나 한중간 정치·사회적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양국은 수교 이후 가장 극심한 갈등을 경험했다.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중앙정부간 협력과 더불어 민관산학 각계의 협력과 노력, 특히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양국 관계를 이어주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중관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전략적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며, 양국 지방교류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아시아 역설 상황에서 한중 지방정부 역할과 교류의 중요성 등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양국 지방정부의 대외교류 체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상호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2. 동아시아 역설과 한중 지방정부 교류의 중요성

1) 동아시아 역설(paradox)의 심화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교류의 역사를 통해 많은 문화자산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세계화와 함께 정치경제적 상호연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적 교류도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 이래 서로간의 역사 해석 및 영토 문제 등을 포함하여 각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갈등과 충돌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가 첨예한 국제관계 게임의 장으로 부상하면서 크고 작은 정치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느 지역에 못지않게 민족·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역내국가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각국의 거시적 국제관계 정책 및 핵심이익과 관련된 공식적인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국 정부는 민족·국가주의에 뿌리를 둔 이러한 성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2) 한중 지방정부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

1) 이 글은 공주대-충남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를 위해 작성한 것이다. 글에서는 장호준·김수한(2016)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일부 추출·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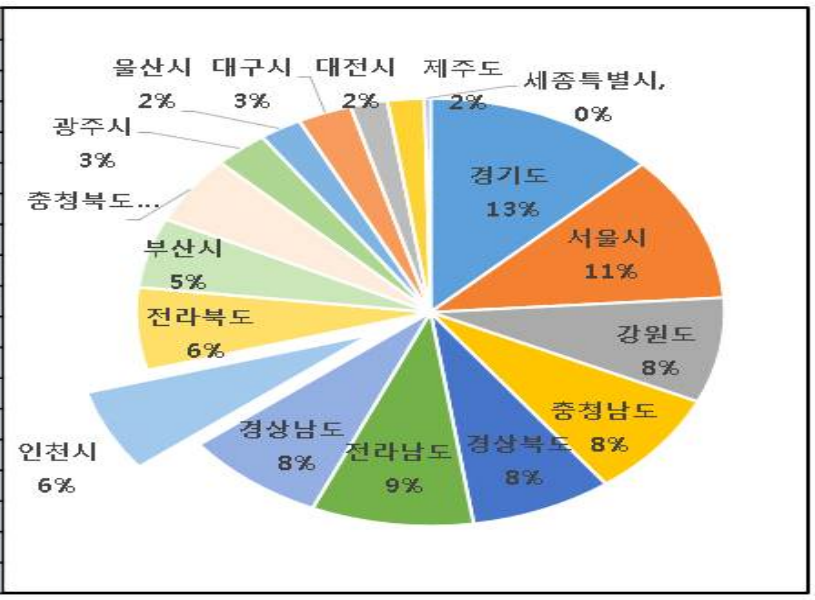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국가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갈등 현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축적된 사업기획력, 업무추진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한중 양국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 기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지방정부간 교류는 한중 국제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상층(중앙정부) 교류와 기층(국민) 교류를 매개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량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채널을 다층화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형, 체감형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지방정부가 구축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축적된 교류 경험은 양국관계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2017년 11월 기준 한국의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가 중국의 지방정부와 640건의 자매 또는 우호도시의 결연관계를 체결한 상태이다.[3)] 이는 한국 지자체가 일본 지방정부와 체결한 195건의 자매우호도시 결연은 물론, 미국의 지방정부와 체결한 154건의 결연 체결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양국 지방정부 자매우호결연관계는 각종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지방정부 - 중국 자매우호 결연 비중 (2017.11)

한국지방정부	
경기	82
서울	71
강원	51
충남	51
경북	50
전남	57
경남	50
인천	40
전북	40
부산	34
충북	33
광주	19
울산	15
대구	19
대전	13
제주	13
세종	2
합계	640



자료: 한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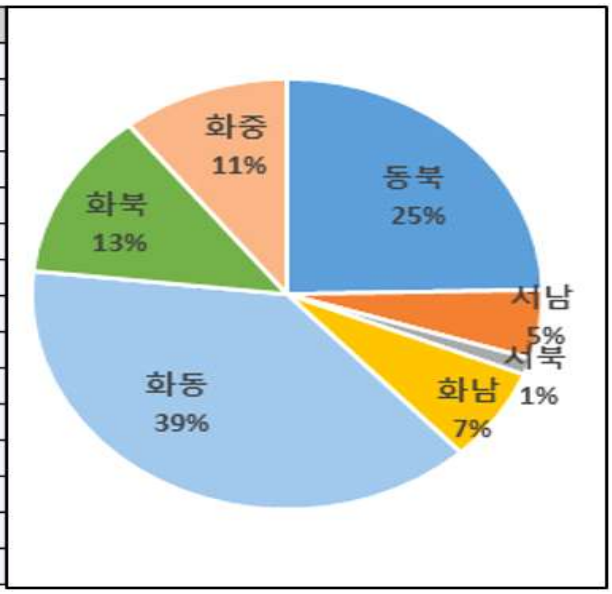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8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309개의 지방도시는 전세계 133개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도시와 2181건에 달하는 우호관계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의 지방정부와의 우호도시관계(한국의 자매교류에 해당) 체결 건수는 157건으로 일본(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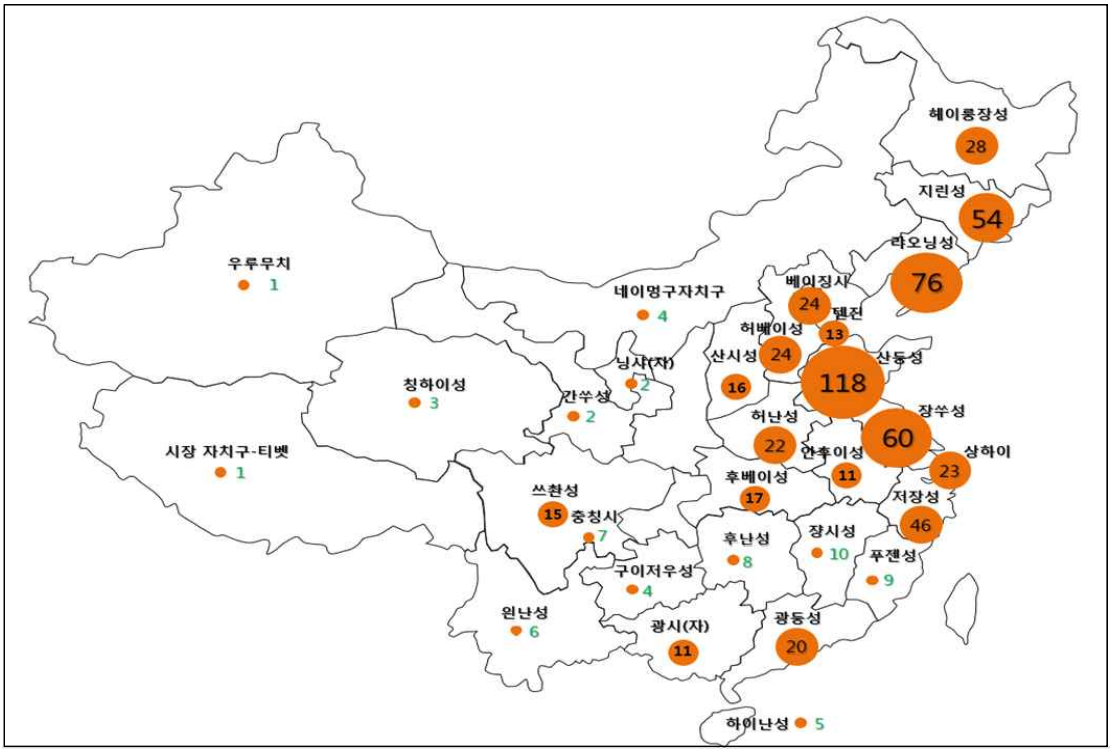
2) 전지구화 시대에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에서 갖는 역할과 위상에 대한 내용은 신종호 외(2012: 265) 참고.
3) 한중지방정부 자매우호 결연 현황은 한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DB활용하였다. .
(http://www.gaok.or.kr/gaok/exchange/listNation.do?menuNo=200082:검색일 2017-11-18)

과 미국(243)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2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한중 수교의 역사를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의 지방도시가 상호교류에 매우 적극적임을 방증한다. 기존에 체결된 지방도시간 네트워크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사업의 고리로 활용하여 한중관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한국지방정부 - 중국 자매우호 결연 지역 분포 (2017.11)

중국지방정부			
산둥	118	광시	11
랴오닝	76	장시	10
장쑤	60	쓰촨	15
지린	54	안후이	11
저장	46	푸젠	9
베이징	24	충칭	7
상하이	23	후난	8
허베이	24	네이멍구	4
헤이룽장	28	하이난	5
허난	22	칭하이	3
광둥	20	간쑤	2
후베이	17	닝샤	2
톈진	13	구이저우	4
산시	16	시짱	1
윈난	6	신장	1





자료: 한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자료 정리

3. 한국 지방정부 국제사무 구조 및 특징

많은 한국의 지방정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점차 교류지역이 확대되고 그 주체와 영역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교역확대, 관광진흥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한중FTA 등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고자 중국과의 비즈니스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 경제통상형 국제교류 조직체계

이 같은 경향은 한국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체계와 같은 제도 및 공식 업무에 반영되어 있다. 우선 <표1>과 같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중국교류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70%이상의 12개 시·도 정부가 중국교류 주무 부서를 경제계열에 두는 경제·통상형 국제교류 조직체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별·광역시 중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은 국제도시네트워크 수립·관리 및 내향적(inbound) 국제화에 주안점을 두는 도시외교형 국제교류 조직체계를 두고 있지만, 서울 등은 경제 부서에 별도의 중국담당자를 두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국 등의 관광부서에 중국팀 또는 담당자를 두는 광역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 직접적이고 단기적 경제 효과 중시 국제교류 경향

<표2>와 같이 17개 광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중국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 분장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지방정부와의 자매우호결연을 포함한 도시네트워크 관리, 의전 및 통·번역 등의 중국교류 일반 업무 외에 통상·투자유치, 관광진흥·홍보마케팅, 중국 현지 정책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조직 및 업무 분장은 공식적 제도로서 관련 행위자의 이해와 선호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경제효과 및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국제교류 정책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표 1> 한국 광역 지방정부 중국교류 주관 부서 조직 현황

	실/국	담당관/과		팀(중국전담인원)
특별·광역시				
서울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류담당관	중국팀(4)
	-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1)
부산	산업통상국	통상진흥과		아시아통상팀(1)
	문화관광국	국제협력과		국제교류팀(3)
대구	-	국제협력관	국제통상과	국제교류팀(1)
인천	-	중국협력담당관		중국교류기획팀(5) 중국정책개발팀(3) 중국투자유치팀(3)
대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중국담당(2)
광주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중국담당(2)
	문화관광정책실	관광진흥과		중국담당(2)
울산	창조경제본부	통상교류과		국제교류담당(1)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1)
세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제협력(2)
도·특별자치도				
경기	경제실	국제협력관	투자진흥과	아주팀(1)
			외교정책과	아주협력팀(2)
강원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		중화권팀(1)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해외마케팅팀(1)
충북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국제협력팀(3)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		관광정책팀(2)
충남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		중화권팀(4)
전북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국제교류팀
전남	경제과학국	국제통상과		중국협력담당(6)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2)
경북	일자리민생본부	글로벌통상협력과		국제통상담당(3)
경남	미래산업본부	국제통상과		중국담당팀(4)
제주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중국협력팀(4)

자료 : 각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

<표 2> 한국 광역 지방정부 중국교류 업무 개요

지자체		중국관련 부서 주요 업무
광역시	서울	○ 중국지역 자매우호도시(타이베이 포함) 교류협력 ○ 중국지역 주요 거점(신규)도시 및 제도시 교류 ○ 전략적 중국교류협력 방안 마련 및 시책사업 발굴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운영, 베세토 중국 추진업무 ○ 시 대표단 해외순방 및 외빈방문 지원 ○ 중국외빈 시장단 접견 및 행사관련 통.번역 업무 ○ 서울클럽 등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중국의 날 등 중국관련 행사 추진 ○ 중국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관련 프로젝트 진행 ○ 중국지역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아이템 발굴 ○ 중국지역 라운드테이블, 투자유치관련 통계(MOU)관리
	부산	○ 중화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상담회 등) ○ 국제도시간 경제협력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중화권) ○ 대 중국 경제교류협력 관련 업무 ○ FTA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경제통상국, 일자리산업실 (경제관련업무)소관 통번역 (중화권) ○ 중국어권 정책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해당지역 자매, 우호도시 연락업무
	인천	○ 중국지역 투자유치 및 한중FTA 기업지원 ○ 민관 중국교류사업 지원 및 중국교류 시책사업 발굴 ○ 중국 주요거점도시 자매우호결연 및 인적교류 관리 ○ 對중국·화교권, 영어권 등 투자유치 추진 ○ 투자관련 브로셔 중국어 번역 및 제작지원 ○ 중국·화교권 IR 지원
	광주	○ 중국, 홍콩, 몽골, 동남아시아권 국제교류 사업 ○ 중국인관광객 유치활동 및 지역관광마케팅 ○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 / ○ 중국유학생프렌들리 행사
광역도	경기	○ 중국 국제교류 추진 ○ 중국 교류지원 ○ 중국자본투자유치
	강원	○ 중화권 외국인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 추진 ○ 중화권 시장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 팸투어, 설명회, 박람회 참가, 세일즈 콜, 간담회 - 현지 시장 관광동향 파악.분석.관리 - 중화권 시장 대상 관광상품 개발.육성 - 중국시장 온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 ○ 상하이.베이징.선양 강원관광홍보센터 운영 및 지도
	충북	○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운영·관리 ○ 중국인유학생 SNS기자단 운영
	충남	○ 중국 등북3성과의 교류업무 추진 ○ 중화권 통상관련 업무 지원 ○ 중화권과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중화권 교류일지 및 교류통계 작성 ○ 중화권 관련 자료 수집 및 제공 ○ 중화권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추진 지원 ○ 중화권 교류관련 각종 업무보고
	전남	○ 중국 통상 및 교류협력 추진 ○ 중국 진출 도내기업 지원 ○ 대중국 정책과제 발굴 및 협력채널 운영 ○ 중국 동반성장·협력전략 수립 추진 ○ 중국 해외자매결연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 대중국 신규사업 발굴 및 교류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중국 지방정부 경제·문화 협력 및 민간과의 교류협력 증대 ○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중국 시정 조사·연구 ○ 중국관광객유치 마케팅업무
	경북	○ 중화권 교류사업 추진, 중국국제교류원 관리 ○ 중국교류지원, 통역
	경남	○ 중국 동반성장·협력전략 수립 추진 ○ 對중국 신규 사업 발굴 및 교류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중국 및 아세안지역 진출 도내기업 지원 ○ 중국관련 정보 종합분석 및 관리
	제주	○ 대중국 정책과제 발굴 ○ 대중국 협력채널 운영 ○ 부동산투자이민제도관리 ○ 중국 자본현황 관리

자료 : 각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4. 중국 지방정부 국제사무 구조 및 특징

1) 외사판공실 구조 및 사업 경향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외사판공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집권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대외교류에 있어서도 중앙의 통일관리와 지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외교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같은 자율성 및 주권을 지닐 수 없다.[4)]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의 지방 국제교류는 중앙 당정의 외교지침 견지를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현지 경제사회발전의 종합적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사회문화 교류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문화교류가 중국 지방 대외협력의 중요 사업 유형이자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교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국제교류의 핵심 사업과 가치로서의 사회교류와 각종 인적, 문화적 교류사업이 외사판공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중요 외교방침인 공공외교가 지방 국제교류의 중요한 사업이자 방향으로서 관철되고 있다.[5)]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 조직구성을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지역 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대외일반사무업무부서: 종합행정부서, 해외안전, 출입국관리 등 ②국제지역사업처: 대륙별 교류사업, 홍콩·마카오, 접경지대 대외사업부서 ③대내외 민간교류 부서: 국제교류처, 대외인민우호교류협회. 국제지역사업 부서는 대개 대륙별로 나누어 아시아태평양, 유럽·미국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과의 교류업무는 아시아태평양 부서에서 담당하게 된다.

<표 3> 중국 성급 지방정부 외사판공실 조직구성

	비서처	종합행정처	인사처	의전처	정책법규처	영사처	해외관리,안전처	출국관리처	신문문화처	교민처	국제교류처	여권비자사무처	비정부조직처	경제과학처	변경/주변국사업처	홍콩/마카오사무처	지역처	대외인민우호협회
베이징	○		○	○	○	○	○	○	○				○			○	○	
상하이	○	○	○	○	○	○	○	○	○			○		○		○	○	○
톈진		○					○	○								○	○	○
충칭	○	○	○	○	○	○	○	○	○	○				○		○	○	○
헤이롱장	○		○			○	○			○					○		○	○
지린	○	○	○				○			○		○			○	○	○	○
랴오닝	○	○	○	○		○	○	○	○	○						○	○	
산둥	○	○	○	○			○	○								○	○	○

4) 중국의 지방 국제교류는 성(省), 시(市), 구(區) 및 현(縣)급 정부의 외사판공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외사판공실은 동급 지방정부의 구성 부분으로서 지역 대외업무의 종합관리 부서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국무원 외사판공실의 지도를 받으며 각 급 정부에 설치되었던 지방 외사판공실은 문화대혁명 기간 폐쇄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성급의 지방외사판공실이 점차 부활했으며 이후 지방 국제교류 수요 증가에 따라 현급 및 학교, 기업 등에도 외사업무 부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 지방외사판공실 연혁 및 역할에 대해서는 李惠娟(2014, pp. 16-17) 참고.

5)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공외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지방정부 대외교류 방침에 대해서는 산둥성 모지급시 외사판공실 간부 인터뷰.

허베이	○	○	○		○			○		○						○	○	○
허난		○	○	○			○	○		○	○			○		○		○
산시		○	○	○			○	○	○	○	○	○				○		○
장쑤	○	○	○	○		○		○	○			○				○	○	○
안후이	○	○	○	○		○		○		○				○				○
후베이	○		○			○		○		○		○				○	○	○
후난	○		○	○			○	○	○	○	○					○		○
샨시	○		○	○		○	○	○	○	○				○		○		○
장시	○		○	○		○		○	○	○	○					○		○
저장	○	○		○		○		○	○	○				○		○	○	○
푸젠	○	○	○			○	○	○			○					○		○
광둥	○		○	○		○	○	○	○		○	○						○
쓰촨	○		○	○		○	○	○	○	○				○		○	○	
간쑤		○		○				○	○	○	○					○		○
칭하이		○		○			○	○	○	○	○					○		○
구이저우		○	○	○		○		○	○	○						○	○	○
윈난	○		○	○	○	○	○		○		○	○			○			○
하이난	○	○	○			○	○	○	○	○	○							○
신장	○		○	○		○		○	○	○	○	○	○	○	○			○
티벳		○	○	○	○	○		○		○					○			○
네이멍구	○			○			○	○		○						○	○	○
닝샤		○					○	○	○	○							○	○
광시	○		○			○		○	○						○	○	○	○

자료 : 각 성시 외사판공실 홈페이지 내용 정리

2)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의 기능과 역할

중국 지방 국제교류 사업 영역 및 주체의 다양화 경향 속에서 지방 외사판공실의 중앙정부-지방 간, 지방정부 내부 그리고 공공-민간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허브 역할 강화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 민간교류를 진행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지방 외사판공실의 관리 및 지원 속에서 각 지방정부의 상무국 및 관광국 등 실무부처의 대외교류 활동이 전개된다.[6] 또한 대외교류 경험이 부족하고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국 지방도시의 민간단체 및 기관의 경우 외사판공실의 대외협력 경험 및 연계망에 힘입어 보다 손쉽게 해외교류 대상을 선정하고 연계할 수 있다.[7]

이 같은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대외교류 허브 기능은 외사판공실과 명목상 민간외교 사회단체인 지역의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우협)가 합쳐져 있는 조직 구성(合署辦公)을 통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민간외교를 강조하여 왔다.[8]

6) 대외교류에 적극적인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경우 한중FTA와 관련하여 한국 광역지자체와의 포괄적 교류협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정부의 외사판공실 및 산하 한국 사무소를 통한 연계를 추진하고, 이후 실무적인 협력단계에서는 상무국과 관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2015년 12월,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관계자 면담).

7) 해외자매우호도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매년 국제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산둥성 지난시외사판공실의 경우 참석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하 지방정부 및 사회단체의 해외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였다.

8) 냉전시기 서방국가(혹은 소련) 등과의 국교단절 등 외부 여건을 극복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은 민간외교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왔다. 관련 내용은 李惠娟(2014:105) 참고.

중국 민간외교의 컨트롤타워인 전국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전국우협)는 1954년에 설립된 전국성 인민단체로서 실질적인 국가급 외교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대부분의 지급시 이상의 지역에 275개 지방급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지방우협)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다.[9)]

지방우협의 경우 지역에서의 민간외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베이징시, 랴오닝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우협은 현지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과 통합운영 되고 있다.[10)] 중국 각 지방우협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전 세계 각 도시들의 민간 국제교류 조직과 연계를 맺고, 교량 역할 및 유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② 민간 대외 경제, 무역 협력, 주요 인적 교류 주관 ③ 문화·체육·교육·과학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국제교류 추진 ④ 청소년 교류 및 각종 전시회 행사의 주관 관리 등이다. 일반적으로 외사판공실의 총책임자인 주임(主任)이 지방우협의 장을 겸임하며, 부주임 가운데 1인이 지역 우협의 운영 책임을 담당한다.[11)]

지방우협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외 민간교류가 여전히 반관반민(半官半民)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서,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사판공실과 우협의 통합적 체계로 인해 지방 차원에서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5. 나오며: 종합 및 제언

■ 한중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여건에 부합하는 교류아이템 및 채널 필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교역확대, 관광진흥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광역 지자체가 경제통상 또는 투자유치 부서 체계에 중국 교류 부서를 배치하여 두고 있으며, 관련 업무 내용 역시 경제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교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외교 및 민간외교에 대한 당과 중앙정부의 강조를 배경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국제교류사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대 중국교류 목적과 지향에 부합하는 동시에 실질적 협력 대상인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고안해야 한다. 국제교류에 있어 일방의 경제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아이템으로는 한중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 기층 <경제인교류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양국 지방정부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업으로 ① 한중청년창업인큐베이팅 기지 공동운영 ②국유기업

9) 지역 우협 수는 전국우협 홈페이지 참고. http://goo.gl/lCMGwL (검색일: 2015년 10월 25일)

10) 1981년 설립된 베이징시 인민대외우호교류협회는 중일수교 정상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과의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립적 조직 구성을 가진 경우이다. 이 같은 조직형식은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설립 초기 조건 및 지역 여건/필요성에 의한 것임. 현재 베이징우협의 회장은 베이징시 공산당위원회의 부서기인 뤼이원(吕锡文)가 겸직하고 있다. 베이징 우협의 직원은 시 공무원의 신분이며, 베이징우협은 시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베이징우협 관계자 인터뷰 2015년 8월 6일)

11) 산둥성 모지급시의 경우 외사판공실에 인민우호교류협회의 실질 사무 책임을 담당하는 1인의 처장을 두고 있으며, 비서장 1인 그리고 실무 부서원 1인이 배치되어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5년 8월 11일).

경영진연수 등을 예시(例示)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 경제교류 내실화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한중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기지 공동운영>

○ 청년창업을 강화하고 있는 한중 양국 정부의 국정기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한중청년창업인큐베이팅기지>를 공동으로 설립

○ 양국 도시에서 선발된 청년들이 입주하여 한중 양국은 물론, 세계에 범용(汎用)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공동으로 모색함

○ 정부 및 기업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

<텐진 국유기업경영진 인천연수 (2014-2015년)>

인천 공공시설 및 산업체 탐방

- 컴팩스마트시티
- 뷰티공동판매숍 '휴띠끄'
- U-CITY 통제센터
- 송도생활쓰레기집하시설
- 송도폐수처리장
- 인천국제항만 등

IFEZ 공공시설, 인천항 방문으로 도시운영 현황을 살펴봄

강좌

- 한국신흥산업발전정책 및 성공사례
- 인천해양물류산업
- 한국금융제도
- 한국발전모델
- 인천경제산업
- 한류 · 브랜드육성전략

중국어 원어강의를 통해 한국 및 인천에 대한 교육 진행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 소래포구
- 월미도/월미전통공원
- 신포시장 등

인천 시민들과 함께 조를 나누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의 명소를 방문하고, 시민들과의 교류기회 제공

의료시설 시찰 및 의료검진 체험

- 인하대학병원
- 길병원
- 국제성모병원

지역내 대형병원을 방문, 한국의 첨단 의료설비를 시찰하고, 의료검진 체험 제공

■ 국제교류 체계화를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정비 및 제도기반 마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전개하기 위해, 각국 국제교류 관련 중앙-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 속에서 對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를 강화하고 내실

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①한중 지방외교 권역별 허브조직 마련

1:1 형태의 한중 지방교류와 별개로, 한중 권역별 지방외교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한중교류에 있어 지방정부간 소모적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협력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권역별 공동 사업 구상을 통해 상호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그리고 상호 보안적 경제산업 교류협력 증진이 가능하다. 例示) '한중환발해권지방정부포럼', '해상실크로드 한중지방정부포럼', '황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포럼','환동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포럼' 등
또한 일본의 ERINA(환일본해연구소)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서해권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초광역지역종합연구소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우협 매칭 국제교류 전문기구 활용

중국 지방정부의 외사판공실과 명목상의 민간(외교)단체인 우협이 합쳐져 있는 조직 구성에 상응하는 교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지방정부의 순환보직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담당자의 국제교류의 전문성과 경험축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지방정부의 여건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국 우협에 상응하는 교류채널로서 한국 지방도시의 국제교류재단 등 전문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제도적 기반 마련

△권역별 허브조직△지방국제교류민간기구 등의 기구 수립 과정에 중앙정부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국제교류 중앙-지방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관련 법제(조례 포함) 및 종합계획의 수립, 국제교류기금을 포함한 재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수한. 2013. 「한·중 교류의 새로운 방식: 인문유대와 도시 간 국제협력」,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1권 4호.

신종호. 2014. 「중국의 대외정책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09).

신종호. 2012. 『한중관계 2.0: 국가를 넘어 지방정부로』 서울: 한울아카데미.

장호준·김수한 2016. 「한·중 인문유대와 지방도시간 인문교류: 현황과 과제」, 『중국과 중국학』 제27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 http://goo.gl/e8zYfo

金正昆·唐妮娜. 2009. 「当代中國外交的新路徑: '人文外交'初探」, 『教學与研究』第8期.

董漫遠. 2009. 「推進'軟實力'建設,加强人文外交」, 『國際問題研究』, 第6期.

李惠娟. 2014. 『外事工作實務』. 暨南: 暨南大學出版社.

薛云. 2007. 「經濟全球化背景下地方政府外事管理研究」, 博士學位論文, 吉林大學.

中國國際友好城市聯合會. 友城統計, http://goo.gl/hvHBiF

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國內地方友協, http://goo.gl/lCMGwL

MEMO

MEMO

MEMO